도 외국인주민 10년 동안 3배 증가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4만4184명 · 전체의 2.4%
'일' 25.2%, '결혼' 12.9%
베트남 출신 1만321명

전북에 사는 외국인 주민이 베트남 출신을 중심으로 4만 명을 넘어서면서 10년 새 약 세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주로 '일자리'를 찾아 전북에 온 것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2.4%까지 늘었다.

행정자치부가 14일 내놓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4만4,184명에 달했다.

이는 전북 전체 인구 183만4,000여명 대비 2.4%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도내 외국인주민수는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6년 1만2,282명 보다 260% 가량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국적미취득자가 전체의 67.7%(2만9,930명), 국적취득자 10.2%(4510명), 자녀 22.0%(9,744명)으로 집계됐다.

일하기 위해 전북에 사는 외국인은 전체의 25.2%, 가족형성을 위해 거주하는 유형은 12.9%에 달했다.

국적별로 보면 동남아 중 베트남 출신이 1만3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북아로는 중국 출신이 8,51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한국계 중국인이 6,084명, 필리핀 3,774명, 캄보디아 2,765명, 태국 2.013명의 순을 보였다.

성별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외국인주민 남성:여성 비율이 54:46인 점을 감안하면 전북은 49 : 51로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외국인주민현황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정과 전담기구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2017 태권도원 공식 모객대행사 모집

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이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태권도원 활성화와 태권도 진흥을 위한 2017년 모객대행사 모집에 나섰다.

공식 모객대행사 모집은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지원 자격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등록 사업자는 누구든 지원이 가능하다.

태권도원의 공식 모객대행사로 선정된 여행사는 재단 인증서가 제공되며, 태권도원 홈페이지에 공식여행사로 게재될 뿐 아니라 고객 유치에 따른 수수료가 매월 지급된다.

또한 2017년 활동 우수 여행사에 대해서는 태권도원 공동 마케팅 협력사로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재단 김중헌 사무총장은 "세계 태권도의 성지인 태권도원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태권도 진흥을 위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많은 여행사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 태권도원 공식 모객대행사 모집의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tkdwon.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및 문의는 모객대행사 담당자(063-320-0117)로도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의회 지방정치제도개선 연구회, 수원 · 성남 비교견학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회장 이병하 의원)가 1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지속가능관광 도시 인증 및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수원과 성남시 비교견학에 나섰다.

연구회는 첫날 자매도시인 수원시를 방문해 염태영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의 지속가능관광 도시 인증 배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청취한 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도입한 신개념 탈거리 3종인 밸로택시, 화성어차, 플라잉수원을 체험했다.

15일에는 '지불 유예 선언' 하고 3년 6개월 만에 이를 해결한 성남시를 방문해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당시 모라토리엄 극복 방법과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성남시의 혁신적인 정책 등을 청취하며 전주시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의정포럼 함께배움, 노인복지정책 간담회 개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의정포럼 함께배움(회장 남관우 의원)이 14일 노인문제와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 및 노인복지지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연구회 회원을 비롯한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노인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지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미등록경로당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경로당을 보수해 2~3개의 거점경로당 형식의 특화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논의됐다. /김영재 기자

아동폭력예방 릴레이 캠페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안전을 지키는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아이들 신호에 응답하라'는 주제로 아동폭력예방 릴레이 서명 캠페인을 송하진 지사의 1호 서명을 시작으로 출발했다.

'박 대통령 퇴진' 도내 촛불집회 이번 주도 계속

수능시험 종료와 함께 학생들 참여 가장 많을 듯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촛불집회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주는 수능시험이 끝나면서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국회의에 따르면 이번 주도 전주 풍남문광장 등 도내 각 시·군에서 시국 촛불집회를 이어간다.

지난달 29일 전주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군산과 익산, 정읍, 김제, 남원, 부안, 장수 등으로 확산된 상태다.

여기에 오는 15일에는 순창에서 '박근혜 퇴진 순창군민행동'이 군민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군민들은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시국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도 전역으로 확산된 촛불에 발맞춰 시국회의는 오는 19일 '박근혜 정권 퇴진 제2차 전북도민총궐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1차 총궐기에 3,000여명의 도민이 참여한 만큼 이번에도 수 천명이 촛불을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에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도 대거 집회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1차 때를 훌쩍 뛰어넘는 인원이 모일 것으로 비상시국회의는 관측했다.

전북시국회의 관계자는 "정권에 대한 분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염원이 시민들의 민중총궐기와 시국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권 퇴진 목소리를 꺾으려는 정부에 맞서 시민과 함께 시국 촛불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비상시국 현안 이슈 대응 추진단' 운영

국비 확보 지역정치권과 공조 · 한미 FTA 재협상 등 논의

전북도가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국내·외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시국 현안 이슈 대응 추진단(이하 비상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시국관련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북경제와 도정 현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비상추진단은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공동 단장을 맡아 수시로 현안과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매주 송 지사 주재 회의를 통해 비상추진단에서 논의된 사항을 도정 운영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비상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소관에 총괄지원팀(기획관), 농축수산식품 대응팀(농축수산식품국장)을 운영하고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수출경제대응팀과 조선업대응팀(조선업 위기대응본부)을 운영한다.

기획관리실장은 총괄책임관의 임무를 맡는다.

이들은 대내외적 시국 동향과 이슈 등을 점검하고 정부 건의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자체 지원방안 마련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전북과 관련된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300억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의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도는 국회상주 대응반을 통해 관련동향을 살피면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역정치권과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군산조선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무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조선업 위기대응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조선업 일자리 지원센터에 도·군산시·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인력을 배치해 현지 실태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지를 위한 '범도민 100만 서명 운동' 전개와 도내 국회의원 등과의 공조를 통한 여론형성에도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미국 대선결과 자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주창해 온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전북 경제에 타격이 우려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FTA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관세율 변화에 따른 전북지역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와 환율 변동에 따른 농산물 수입가격 변동, 쌀 시장 압박 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만만치 않아 매우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냉철한 판단과 중심을 확실히 잡고, 전북 발전을 위한 흐름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